

### 축산업 경쟁력 제고 일환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기업 축산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은 폐지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폐지시기는 여론 및 관련 단체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키로 했다.

이는 한미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농가불안,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축산단체의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축산법에는 일정규모이상 국내 특정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은 양돈·양계업에 직접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제한범위는 모돈 5백두 이상 양돈업, 닭 5만수 이상 양계업으로 다만 종돈·종계업 및 양돈 계열화는 허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이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업화·규모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저해 요인이 있다고 보고, 축산업의 중소기업기준을 '종업원 2백명 미만 또는 매출액 2백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있다.

### 정부 '사료구매자금 1조 지원' 후속대책 발표 - 축산농가 반응 '싸늘'

정부 대책에 따르면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가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원한도금액은 한우·젓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000만원이고 마리당 지원금은 한육우·낙농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오리 650원이며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년, 금리 3%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를 위해서는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양돈농가 1억원, 그외 농가는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담보 완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현장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농가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기간 1년, 금리 3%는 적잖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금액도 너무 낮게 책정돼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농가는 "그 돈으로 당장 밀린 사료비를 갚는다고 해도 1년 후 정부 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가들은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채 이지만 내는 꼴로 정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대책을 냈다"고 비난했다.

한육우 농가의 경우 마리당 120만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농가 한도가 1억원인 점을 감안(83두 이상 사육농가는 1억원이지만 지원해 한육우농가에게 필요한 지원금액을 계산하면 약 2조4468억원이 마련돼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젓소 5660억원, 돼지 8018억원, 양계 7373억원, 오리 628억원 등 약 3조8946억원이 요구돼 필요금액 대비 정부 지원금은 약 25.7%에 불과하다.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농가들은 일반 지자체에서도 사료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1.5~2%로 책정했는데 중앙정부만 유독 고금리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농가들의 현재 경영상황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오히려 부채만 가중시킬 수 있어 상환기간을 최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관계자는 "담보 관련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가들의 경영을 고려했을 때 무이자 자금으로 상환기간을 최소 3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 관계자는 "시도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남는 시도와 예산이 부족한 시도가 각각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물부가 상호 맞추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산업계 환율폭등에 호된 몸살

최근 환율폭등에 따라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큰 동물약품, 사료, 기자재 등 축산산업계가 호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1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원유로 환율은 1600원을 넘어서며 환율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 구매를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산업계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산업계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율 급등세가 어느 시점에서 진정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나나 할 것 없이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가득이나 원료가격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데다 이번 환율상승은 원가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원가상승 부분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나마 수입량을 줄이거나 아예 제품을 단종시키는 등 극단적인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료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 상승까지 떠안게 되면 마이너스 마진도 생각해야 할 판이다. 차라리 사업을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중국, 인도 등 일부국가에서 탈피해 수입창구를 다각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원료의 국내생산도 고려

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사료와 축산기자재 산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곡물가와 금속류 가격이 치솟는 데다 최근 환율상승까지 겹치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고스란히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 농가소득 9년만에 뒷걸음질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사료값 급등 탓에 축산수입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등 농가의 평균 소득이 9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좁혀져 가던 농어업 가구와 전국 평균 가구의 소득차이도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3196만7천원으로 2006년보다 1.0%(33만6천원) 줄었다. 농가 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9년만이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대비 농가 소득 수준도 87.7%에서 1년 만에 82.6%로 크게 낮아졌다.

농가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전체 소득 가운데 32.6%를 차지하는 순수 농업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업 총수입은 2610만2천원으로 4.5% 줄어든 반면, 경영비는 1569만6천원으로 3.1% 늘어났

다. 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 소득은 1040만 6천 원으로 13.9%나 줄었다. 농업외 소득(10.6%), 각종 보조금·연금 등 이전



소득(1.5%), 비경상소득(4.1%)은 늘었다.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이 준 부문은 축산이었다. 소와 돼지 값은 크게 하락한 반면 사료값은 크게 올라, 농가 축산 수입이 무려 19.6% 줄었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영향으로 한우와 돼지의 산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데다, 하반기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사료 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빛은 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가당 부채는 전년보다 6.3% 많은 2994만6천원에 달했다. 어가의 경우, 지난해 평균 소득이 3066만8천원으로 2.2% 늘었으나, 전국가구 소득의 79.2% 수준으로 2006년 81.5%보다 하락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 우유마시기 습관 길러주기 사업추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경우)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손숙미)는 지난 17일 낙농자조금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맺고 전국 4~7세 유아 2만명을 대상으로 우유마시기 습관 길러주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유아대상 우유마시기 습관 길러주기 사업’은 우유의 영양학적 효능과 기능성 내용이 담긴 우유 캘린더를 제작해 유치원 및 유아보육시설에 보급하고 3개월간 매일 우유를 마신 후 우유 캘린더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우유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유음용 유아들에게는 음용실적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11월에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우유의 영양적 우수성을 교육하고 우유음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지속적인 우유마시기를 유도해 유아기 건강증진 및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 중 180

만개의 우유가 소비되며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등 우유소비 정체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농협이 농민들 농기계 사들여라”

이명박 대통령이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농민들의 농기계를 농협이 사들인 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물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기계는 1년 열 두 달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농기계를 모든 농민들이 다 가질 필요도 없다고 본다”면서 “농협은 신용사업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 농협이 농기계를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에 사서 관리하면서 농가에 싼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가부채도 줄일 수 있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1년에 돼지고기를 24만톤 수입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삼겹살’이라는 보고를 받고 “삼겹살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삼겹살 이외의 다른 부분은 많이 남는데, 햄이나 소시지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저소득층과 함께 농어촌 가정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예산지원에서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어 농어촌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입학이나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롯데우유, 美쇠고기 수입사업 추진

롯데우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업에 뛰어들었다. 롯데우유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늦어도 6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우유는 이를위해 미국 쇠고기 판매업체인 블랙앵거스와 손잡고 현지법인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부위는 등심위주에서 시장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껏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매출액이 100억원 안팎의 중소기업체에 불과했으나, 대기업이 참여하기는 처음이다.

### 초유떼기 젓소 산지가 '내리막길' 지속

초유 떼기 암수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농협 조사결과, 전국평균 초유떼기 암수 암지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35만원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8월 30만원으로 하락해 올해 2월부터 20만원으로 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유떼기 수송까지 가격도 지난 해 3월 57만원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져 올해 3월 33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젓소는 적은 폭이기는 하지만 젓소송아지의 판매가 낙농가들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만큼 젓소송아지가격 하락은 그대로 낙농가의 소득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김용철 전남도지회장은 "최근 사료값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사실상 비육우를 기르는 것이 어렵다"며 "젓소 송아지 가격이 실제 애완견 가격보다 더 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권의 한 낙농가도 "최근 메이저 유업체와 진흥회 쿠퍼가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낙농가들이 폐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젓소송아지 가격 하락과 같은 단편적인 예를 보더라도 낙농가들이 심각하게 위기에 처해있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축협협 홍성원 주임은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라 농가들은 입식을 자제하고 앞으로 이뤄질 수입재개에 따라 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불안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산지가격 추이를 보면 젓소송아지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속돼 겨울방학에 따른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당분간 송아지 가격은 약보합세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유가공업체들의 가격인상과 경영 어려움 등으로 낙농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생산비인상으로 인해 낙농가들이 부담이 크다. 젓소도 한우처럼 송아지 안정제를 도입해 낙농소득을 일정부분 보존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료값 대책 요구 '한목소리'

축산단체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안에 사료값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낙농, 한우, 양돈, 양계 등 주요 축산단체가 11일 농수식품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 곡물값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이 축산농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된 값에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료값 상승의 문제점으로 △배합사료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현재의 국제 곡물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사료값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해 사료값 문제 해결 없이는 국내 축산농가 경영불안으로 축산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그 대책으로 사료값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 조성과 사료 물류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료 곡물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 사료원료 곡물 생산기지 건설,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도입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1조원 지원대책과 관련해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때 농신보 특례규정을 적용해 최소 3년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는 조사료 생산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족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휴경지에 조사료 재배단지를 마을단위로 조성해 세제를 지원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단지 임차비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 간척지 등의 낙농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보완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해결, 브루셀라 청정화를 위한 국가보상 책임 강화, 도축세 폐지 및 도축장 구조조정,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한 낙농제도 개선, 우유 학교급식 제도화, 낙농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양돈 생산성 향상 대책, 가축분뇨 처리 근본대책 수립, 양계 의무자조금 추진, 공정한 달걀값 형성 대책 등을 제안했다.

### 중·고생 우유급식 '그림의 떡'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김모군(14·경기 고양시)은 초등학교 때부터 마시던 우유를 이제 학교에서는 마실 수 없다. 김군이 입학한 학교에서는 우유를 급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우유가 급식 식단에 포함되지 않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우리나라 중·고교는 2006년 기준으로 전국 5,157개 학교 가운데 2,259곳으로 무려 44%에 이른다.

우유를 급식하는 중·고교 상당수의 경우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급식 위주로 실시하고 일반 학생들의 우유 희망급식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유급식 중·고교 수는 56%인 데 비해 실제 우유급식 중·고교생의 비율은 18.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심지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급식조차 학교 측에서 신청하지 않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유 보조급식 예산이 충분한데도 학교 측이 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초·중·고교 우유급식률은 일본이나 미국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학교에서의 우유급식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6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우유급식률은 평균 49.8%이나 초등학교 77.8%를 빼면 중학교 23.6%, 고등학교 16.3%에 불과해 일본 92%(2002년), 미국 95%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와 낙농가들은 초·중·고교 우유급식률을 높이고 학교에서 우유 마시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그동안 학교급식과 학교 우유급식이 분리돼 저조한 학교 우유급식률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되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도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 포함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며 "일본의 경우 법률로 학교급식 메뉴에 백색우유를 포함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도 제도적으로 우유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진욱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은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나 중·고교에서의 우유급식 제도는 법률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우유급식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물부 관계자는 “학교 우유급식 시행제도의 의무화’를 마치 모든 학생들이 우유를 꼭 마시도록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해”라며 “또한 학교 급식우유 지침에 따라 중·고교 우유 보조급식이 시행된 지 2~3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학교 우유급식은 갈수록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치솟는 사료값, 일본 대응 살펴보니...안정기금 활용 ...

‘값 올라도 농가 충격 최소화’, ‘사료값이 20.3% 올랐는데도 농가 부담 비용은 7.15%만 늘어...’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사례다. 배합사료 원료 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해 쓰고 있는 일본도 잇단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사료값이 크게 올랐으나 농가들이 사료를 구입할 때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찍부터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해온 결과다. 전문가들은 “사료가격 안정 대책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우리 정부와 큰 대조를 보인다”며 일본의 사례를 본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축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배합사료 11당 가격(공장출고가격 기준)은 2006년 10월 4만 5,037엔에서 지난해 9월에는 5만4,195엔으로 1년 만에 무려 20.3%나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농가들의 사료 구입비는 4만3,437엔에서 4만6,545엔으로 겨우 7.15%만 인상된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말부터 1년 동안 배합 사료가격이 평균 20%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두차례나 추가로 인상돼 농가 구입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농가들에게 사료값 인상분을 그대로 전가하지 않는 것은 사료안정기금이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현재 일본은 사료값 안정을 위해 통상가격차보전금사업(1968년 도입)과 이상가격차보전금사업(1974년 도입) 등 2가지 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통상가격차보전금은 전국농협연합·품목농협연합·일반사료회사 등 3개 민간단체가 적립금을 조성, 당해 분기의 사료값이 직전 연도 평균값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와 사료회사가 50%씩 부담해 조성한 이상가격차보전금은 곡물값이 이상적으로 급등해 통상가격차보전금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때 지급하는데, 이 사업은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라는 별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한해 동안 통상가격차보전금에서 두차례에 걸쳐 490억엔, 이상가격차보전금에서 381억엔 등 871억엔을 지원한 상태다. 따라서 일본의 사료업체들은 국제 곡물값이 급등해도 이들 기금에서 보조를 받아 낮은 가격으로 농가에 사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면 농가와 사료업체가 평상시에 사료값에 적립금을 포함해 거출해야 하는데, 결국 농가 사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